

연내 中企 신산업 인력 1.3만명 키운다... 1.5조 재정 지원

중기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하반기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 청년구직자 10만명-기업 취업지원 비상장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개선 비과세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1만3000명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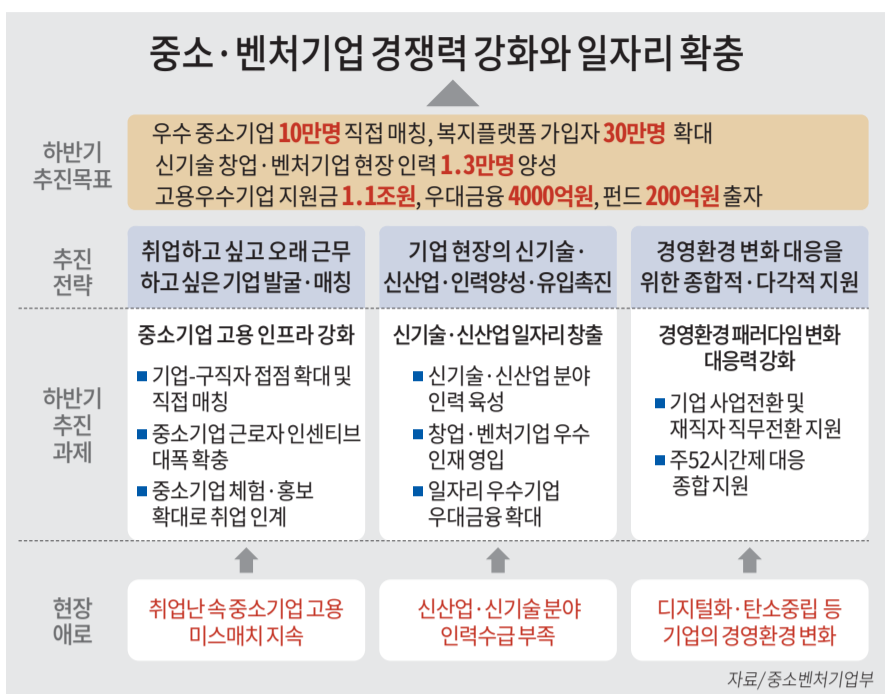
고용우수기업에 1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재정·금융을 지원한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하반기에 총 10만명의 청년 구직자와 우수기업을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에 따라 5~49인 기업에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등 자금·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9일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해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당장 올해안에 ▲국립공고·특성화고, 중소기업계약학과 5개 신설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1만 500명)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통한 인력 양성(1600명)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 확대 통한 취업 연계(150여

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위한 연구인력 파견·채용(500여 명) 등을 통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고급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를 행사이의 기준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과세특례도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까지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행업을 비롯한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하반기 중 1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200억원을 출자, 일자리창출 성과 우수기업에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시 모태펀드가 1대 1 매칭해 투자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증·정책자금 지원도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 우대보증(3000억원), 고용유지보증(2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일자리 창출촉진자금(980억원) 등을 통해서다.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중소기업'도 적극 육성·발굴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일직리를 선별하고,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9만 6000명을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해 하반기까지 기업에게 신규 채용(3명까지) 청년 1명당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청,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반기에 4000여 명의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내년 7만명 더 늘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역시 내년엔 15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기업과 가입자도 1만4000곳·18만명(8월 기준)에서 연말까지 2만곳·30만명으로 늘린다. 제휴를 위한 서비스 공급기업도 현재 136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000여 명을 추천하고,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아울러 주52시간제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약 420억원을 투입해 인건비,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지역신보재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기보의 우대 보증을 연장한다. 중진공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금리도 우대한다.

올해 연말까지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활용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그랜저.

현대車, 그랜저·쏘나타 판매 '적신호'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에 2일간 아산공장 생산중단

국내 세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랜저와 쏘나타 판매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로 인해 9일부터 이틀간 아산공장의 생산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오는 13일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준대형 세단에서 '절대 강자'인 그랜저는 차량용 반도체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8월 그랜저 판매량은 368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4%나 급감했다. 올해 들러 최저치로 전월 판매량인 5257대보다 29.8% 줄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의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현대차는 올해에만 네 차례 아산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아산공장에서는 현대차의 주력 세단인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고 있다.

아산공장의 생산 중단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19 델타 변이

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ECU(전자제어장치) 반도체 공급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오토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 중 하나인 유니셈(Unisem) 직원 3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로 인해 유니셈은 오는 15일까지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유니셈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점유율 1위인 독일 인피니온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인피니온에서 제작한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부품 제작사인 현대모비스로 공급되고, 현대모비스는 모듈 단위로 부품을 만들어 현대차에 납품한다. 말레이시아발 델타 변이가 현대차 공장 휴업으로 '연쇄반응'을 불러온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급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가 포함된) 자동차 부품을 연 단위로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매일 부품 수급 현황을 체크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집값급등, 가계부채·금융불균형 위험 키워”

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올 1~7월 가계대출 증가액 79.7조

집값급등과 사상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우리 경제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괴리가 커져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다 생활자금 및 위험자산투자 수요도 이어지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올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조7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대비 8%를 상회한 이후 올해 4월 이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출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각각 43조5000억원, 36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세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예년 평균(2017년~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주담대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설명회에 최창호(왼쪽부터) 조사총괄팀장, 박종석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봉관수 정책협력팀장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

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및 중저가 중심의 주택구입과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1분기 현재 약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은행의 주담대는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로 증가했으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

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주택시장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지속되며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급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가계대출의 대출수요는 크게 둔화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을 고려해서다.

한은은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이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